

본 자료는 민주노총 총서 '사모펀드(PEF) 동향과 쟁점, 노동의 과제(2022)',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및 노동의 대응(2023)'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사모펀드 및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우리가 몰랐던 불편한 진실

이한진(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 약탈적 기업사냥꾼 ‘사모펀드(PEF)’

사모(私募)펀드는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and high return)’의 대체투자 수단

- 시장의 흐름에 따라 얻는 안정적 수익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소수의 자산가나 기관투자자의 요구
- 탐욕이 최선이다(Greed is good)’는 사모펀드 업계의 경구 /영화 ‘월 스트리트’의 주연배우 대사

▪ 펀드의 정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본시장의 투자 전문가에게 돈을 맡겨,
투자를 의뢰한 후 그 수익을 배분 받는 간접투자 상품”

▪ 자금조달 방법에 의한 분류

구분	내용
공모(公募)펀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
사모(私募)펀드	특정한 소수(기관투자자나 자산가)로부터 자금을 조달

- 공모펀드의 기원 : 1868년 영국 ‘해외 & 식민지정부신탁(The Foreign and Colonial Government Trust)’
/ 설립취지 “이 신탁의 목적은 투자를 여러 종류의 외국 및 식민지 정부 증권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대자본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
- 특정한 소수의 개념 :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투자자 + 금융투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투자자”
(고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

역사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은 공모펀드 vs ‘고수익 창출’이 유일한 목표인 사모펀드

■ 공모펀드의 기본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

구 분	내 용
본질적 특성	1. 공동투자 2. 대행투자 3. 분산투자
사회적 역할	1. 산업자금의 조달을 지원 2. 개인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 3.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

자료) 사모펀드 규제 완화의 결과(이한진, 2020)

■ 사모펀드의 기본적 특성과 분류

- 시장수익률(주식&채권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수의 투자자를 위한 대체투자 수단
- 2019년 6월 기준 시장규모 약 10조 달러, 이중 약 40%가 사모펀드(PEF) 투자

구 분	운용사 명칭	투자대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론스타, MBK파트너스, 코링크PE, KKR, 칼라일	기업의 경영권 의결권 보유지분 10%이상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주식, 채권, 환율, 원자재, 파생상품 등

자료) 사모펀드 규제완화의 결과(이한진, 2020)

주)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 전 분류 사례임.

주)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기관전용사모펀드(PEF)로 명칭 변경

사모펀드는 ‘비공개성과 불투명성, 레버리지(차입) 투자’라는 특성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비교

구 분	공모(公募)펀드	사모(私募)펀드		
		PEF	벤처캐피탈	헤지펀드
모집방식	공모	사모(100인 미만)		
공시여부	공시의무	비공시		
정보공개	공개	비공개		
자기자금 출자	불가능	가능		
차입	규제	제한 없음(한국 일부 규제)		
공매도	규제	제한 없음(한국 일부 규제)		
통제	감독기관	주주 자율 규제		
경영참여	단순 투자	적극적 참여		참여 가능
투자기간	중장기	중장기(통상 3~10년)		제한 없음
투자대상	주식, 채권	주로 비상장 기업 M&A	벤처기업	제한 없음
유동성	개방형 & 폐쇄형	폐쇄형 펀드 (만기 해지, 조기청산 가능)		개방형펀드
성과측정	시장 비교	내부수익률(IRR 측정)		

자료) 사모투자펀드와 M&A(윤승환외, 2020)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재 매각하여
고수익 창출하는 '바이 아웃(Buy-out)' 펀드 주목

■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의미

구 분	주요 내용
Private	특정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유연한 펀드 운용이 가능
Equity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투자이익 실현을 위해 지분증권에 투자함. PE(Private Equity), '공개적으로 매매하지 않고 보유할 지분(유통되지 않는 보유지분)'이라는 의미도 존재.
Fund	관련 전문가에게 투자를 위탁하는 간접투자상품

■ 투자전략에 따른 사모펀드 분류

구 분	투자전략의 주요 내용
기업인수 (Buy-out)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한 후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뒤, 재매각하거나 상장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
벤처캐피탈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초기단계 기업에 자 금지원 및 경영자문을 제공. 경영권에도 적극 관여
성장자금 (Growth Capital)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중견기업들에 대하여 경영권 취득보다는, 소수지분 방식의 투자로 기업 성장을 도모하 여 투자자금을 회수
세컨더리 (Secondary)	사모펀드가 이미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사모펀드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의 투자
메자닌 (Mezzanine)	은행 대출 외의 자금조달 방식을 선호하는 확장 단계 기업이 발 행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상환우선주 등 주식과 채 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금융상품을 취득하는 투자
부실자산 (Distressed)	부실화된(or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한 후, 적극적 인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수익을 추구. Distressed Seller(소유자만 부실), Distressed Assets(자산이 부 실, Distressed Loan(채무자 부실) 등으로 구분

사모펀드의 주된 전략은 '구조조정(Restructuring)'으로 매매차익 극대화가 목표

→ 피인수기업은 현금이나 자산을 약탈하기 위한 대상에 불과

■ 구조조정 주요 기법

- 배당을 위한 자본구조 재조정(Dividend Recap, 배당을 위해 고수익 채권 발행 등)
- 회사 분할(피인수 기업의 부동산 활용) 및 노동자 해고,
- 세금 차익거래(Tax Arbitrage, 조세 회피지역에 특수목적 법인 설립 등)
- 채권 재매입(Buying Back Debt, 피인수기업의 시장 유통채권을 싼 값에 매입 부채비용 감소)
- 부채교환(Debt Exchange, 채권자에게 원금 삭감 등을 요청)

■ 사모펀드가 사회적으로 야기하는 문제

- 피인수기업의 성장동력을 훼손(단기적 관점에서의 성과 도출에 집착하기 때문)
- 피인수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과도한 배당금과 자문수수료, 차입자금을 피인수기업에 전가)
- M&A 시장 경쟁을 격화, 기업인수비용을 높임에 따라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M&A를 구축(驅逐)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차입인수(LBO)**, 기업 생존(노동)에 큰 위협

→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상 배임죄 적용 가능하나, 사모펀드 회피 전략 구사 / 노동조합 특별 경계 필요**

1. 차입인수(LBO)의 양면성

- 사모펀드 모델의 기본 전제 ; 높은 레버리지와 이자 비용 면세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
-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M&A의 경우 피인수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
- 2020년 논문(Ayash Brian) :
LBO 방식으로 인수된 피인수기업들이 일반 피인수기업들에 비해 파산위험이 10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
- 2017년 파산신청한 토이저러스 사례의 교훈 (인수총액 75억 달러 중 66억 달러가 차입, 연 이자비용만 4억 달러)

2. 미국의 경우 차입금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차입인수라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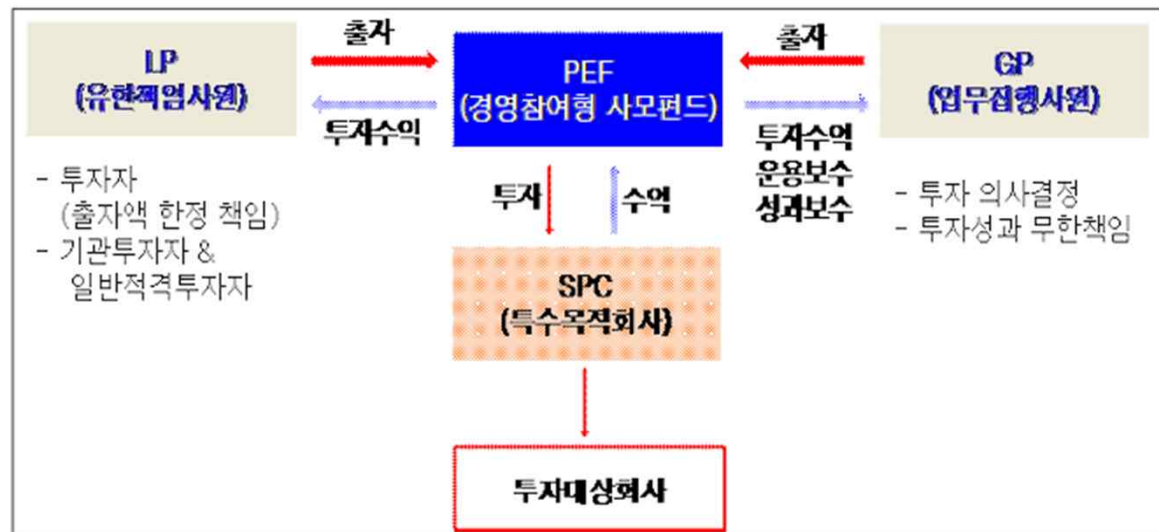
- 미국 바이아웃 펀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금 조달
-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며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 될 때마다, 레버리지 규모가 커졌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
- 특히 배당지급을 위한 추가대출(Dividend Recapitalized) 논란 심각한 수준

3. 한국의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차입인수라 정의 (상법상 배임죄 적용 가능)

-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배임죄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입금 이전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①SPC와 피인수기업의 합병
②유상감자 ③SPC 병행설립' 등의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단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현실적 문제 상존

사모펀드(PEF)는 자금을 모집한 후 투자 집행부터 회수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운용사(GP)**’를 지칭

■ 사모펀드(PEF)의 기본구조



■ 운용사(GP)와 투자자(LP), 폐쇄형펀드

- 운용사(GP) : 자금 모집, 펀드 등록, 투자 건 발굴, 실사, 투자집행 및 투자 회수 등 펀드 운용 책임 역할
- 투자자(LP) : 사모펀드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재무적 투자자
- 폐쇄형 펀드 : 펀드가 청산되기 전까지 자금을 인출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투자기간 3~5년, 투자회수 기간 3~5년 등 6~10년이 환매제한(Lock-up)기간

국내외 사모펀드 운용사 TOP 3

- 글로벌 : ‘블랙스톤(Blackstone), 칼라일 그룹,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 국 내 :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TOP 10

2020년 순위	2019년 순위	업체명 (본사 소재지)	펀드 규모
1	1	Blackstone Group (미국 뉴욕)	95,951
2	2	Carlyle Group (미국 워싱턴 D.C.)	61,719
3	3	Kohlberg Kravis Roberts (미국 뉴욕)	54,760
▲ 4	12	TPG Capital (미국 포트워스)	38,682
5	5	Warburg Pincus (미국 뉴욕)	37,587
▲ 6	10	NB Alternatives (미국 뉴욕)	36,505
▽ 7	4	CVC Capital Partners (영국 런던)	35,877
▽ 8	7	EQT (네덜란드 스톡홀름)	34,461
▲ 9	19	Advent International (미국 보스턴)	33,491
▲ 10	14	Vista Equity Partners (미국 캘리포니아)	32,095

자료) Private Equity International 300(2020 기준), 윤승환(2020) 재인용
 주) 펀드규모는 최근 5년간 신규 출자약정액의 합계 금액임. (단위 : 백만 달러)

■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TOP 10

순 위	2013.03		2019년말	
	GP 명칭	약정액	GP 명칭	약정액
1	MBK 파트너스	53,217	MBK 파트너스	108,010
2	한국산업은행	43,970	한앤컴퍼니	81,215
3	미래에셋자산운용	18,189	IMM PE	53,056
4	맥쿼리자산운용	17,642	IMM Investment	34,861
5	연합자산관리(유암코)	15,707	한국산업은행	33,128
6	IMM Private Equity	13,046	연합자산운용(유암코)	32,612
7	이큐파트너스	11,792	STIC Investment	31,663
8	신한PE투자자문	11,691	VIG Partners	27,542
9	보고인베스트먼트	10,583	JKL 파트너스	14,952
10	KTB PE	9,342	한국투자 PE	14,639

자료) 2013년 순위(이원희, 2015), 2019년 순위(윤승환, 2020) (단위 : 억원)
 주) 출자약정액 기준 순위이며, 2이상의 GP가 운용중인 공동펀드의 경우 2013년 자료는 GP수대로 안분했고, 2019년 자료는 전체 약정액으로 일괄 집계 한 것임.

■ 사모펀드(운용사)의 3대 수익

- 1) 관리보수 : 펀드의 기본 운용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 투자기간 중 약정액 기준, 투자회수 전 실제 약정액 기준 1.5~2% 수령
관리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1.5% 수준까지 하락.
- 2) 성과보수 : 초과 수익의 20% / '8%(기준수익율), 20%(성과보수) 규칙'
역사가 오래된 대형 운용사일수록 관리보수보다는 성과보수 중요.
특히 운용인력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함.(성과보수 세율에 대한 사회적 논란 야기)
- 3) 수수료 : 거래 수수료(transaction fee)와 모니터링·자문 수수료
피인수기업이 부도 위기에 몰릴 정도로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와의 마찰은 물론 사회적 논란도 야기

■ 주요 투자회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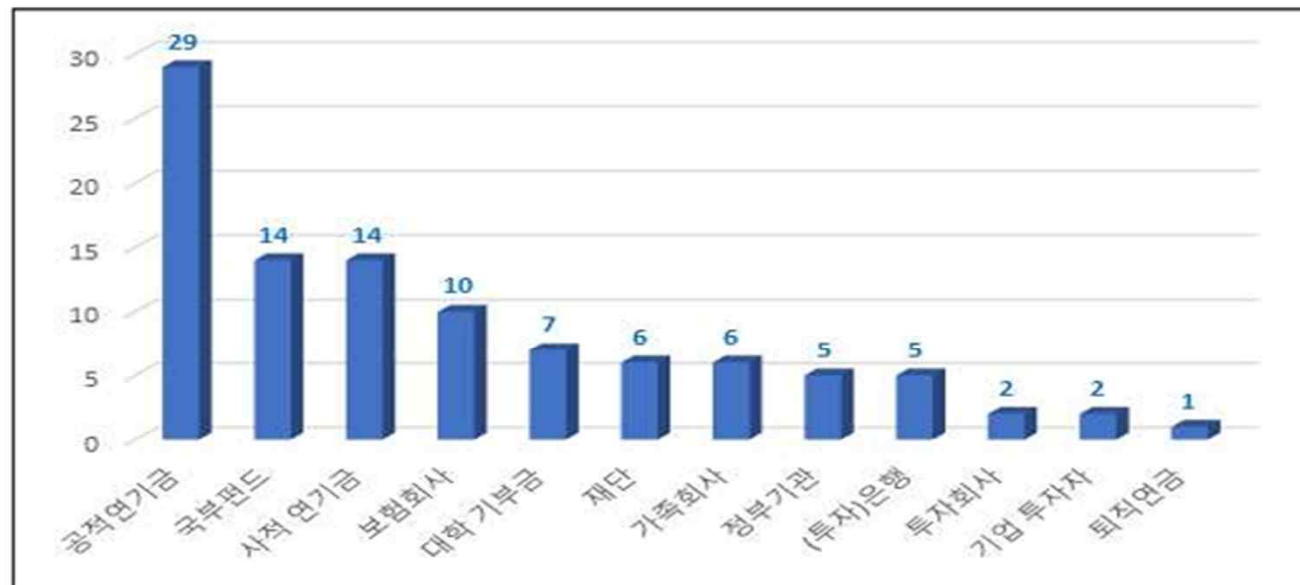
- 1) 트레이드 세일(Trade Sale) : 전략적 투자자에게 기업 매각,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성 중요
- 2) 세컨더리(Secondary) 바이아웃 : 재무적 투자자, 주로 다른 사모펀드에 매각
- 3) 스펙(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기업인수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먼저 상장한 후, 대상 회사 인수
- 4) 기업공개(IPO) : 거래소에 상장
- 5) 구조조정(Restructuring) : 재무적구조조정(배당,감자)이나 사업적구조조정(매각, 축소) 전략

글로벌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자는 연기금과 국부펀드

→ 공적연기금(29%), 국부펀드(14%), 사적연기금(14%) 비중 약 57%

/ 2014년 6월 투자액 기준(자료 : Preqin)

■ 글로벌 사모펀드(PEF) 투자자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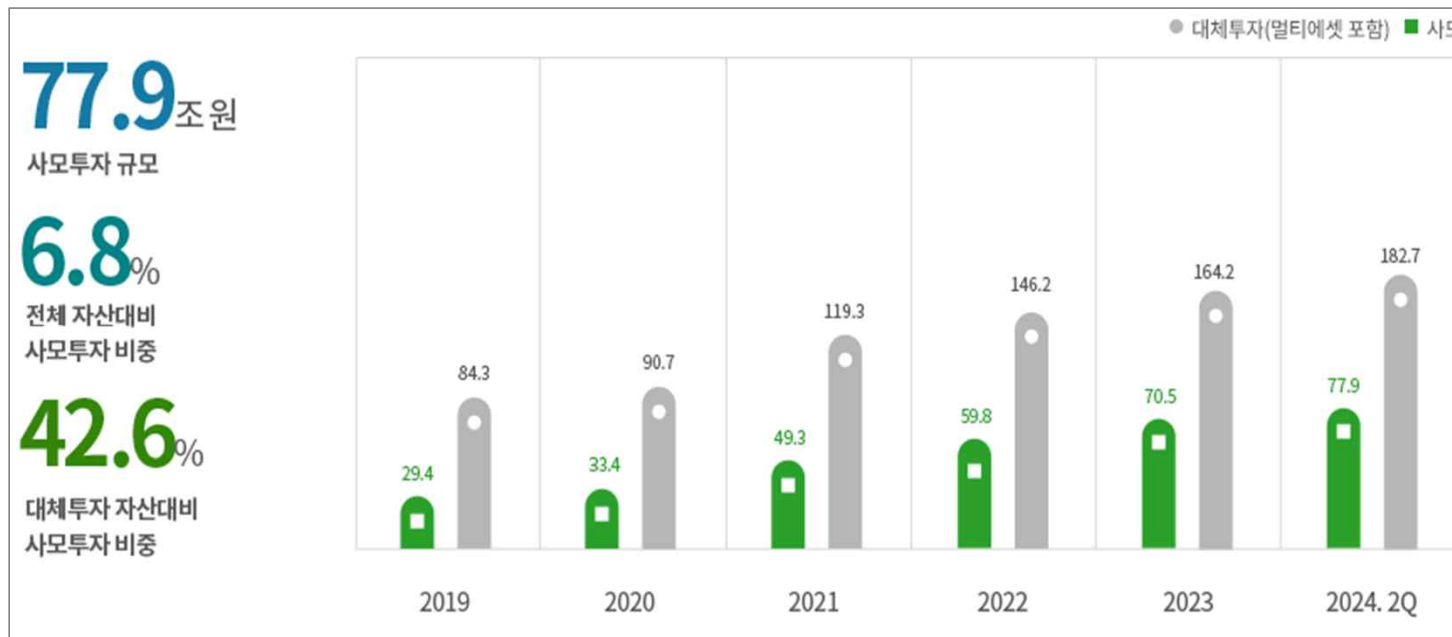
자료) Preqin Investor Outlook: Alternative Asset (Preqin, 2015)

주) 2014년 6월말 투자금액 기준.

국민연금 대체투자 규모 증가세 지속, 특히 사모(私募) 투자 급증

→ 대체투자 총액 : 2019년 84.3조원에서 2024.2Q 182.7조원으로 116.7% 증가
 사모(私募)투자 : 2019년 29.4조원에서 2024.2Q 77.9조원으로 165.0% 증가

■ 국민연금 대체투자 및 사모(私募)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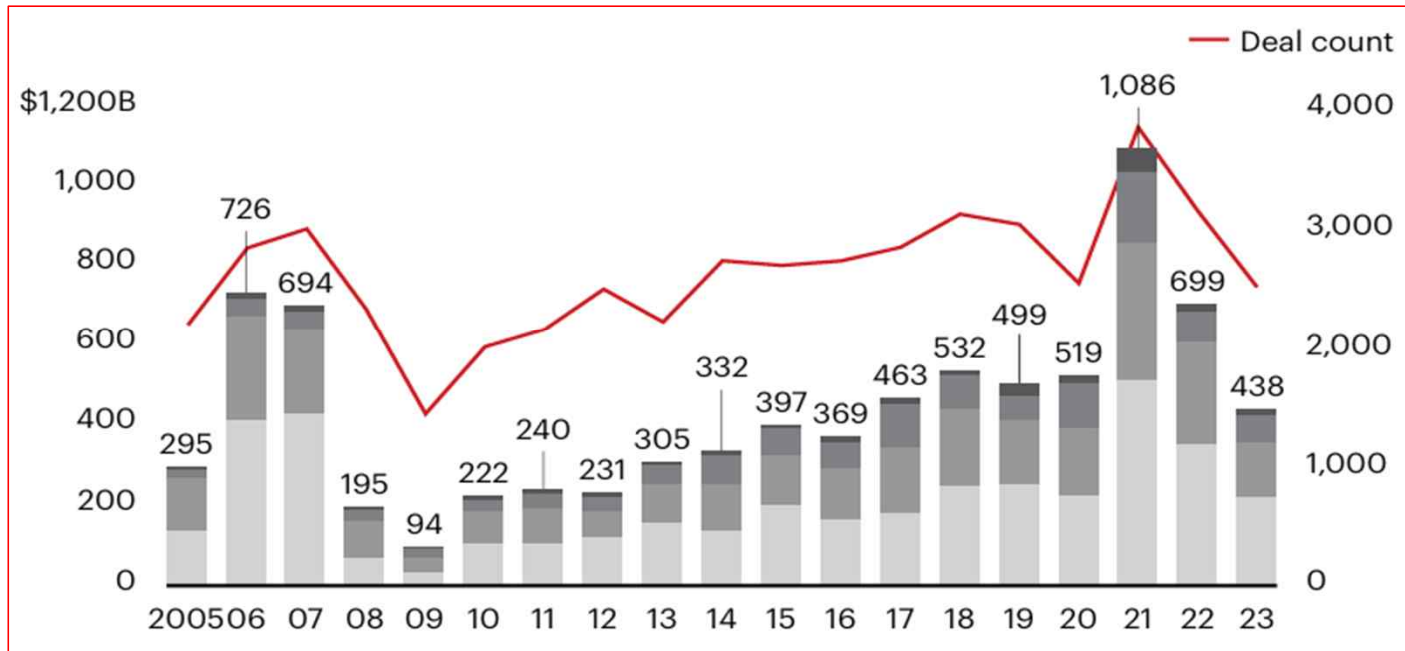
자료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2024.10.21 검색 기준, 단위 : 조원)

주 : 사모투자는 사모펀드(PEF)와 헤지펀드, 사모대출을 포함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완화로 2021년 큰 폭 성장, 이후 금융긴축 및 경기침체로 시장 침체 국면

→ 2024년 하반기 이후 금융정책 기조 변화(긴축 → 완화)로 시장 규모 증가할 전망

■ 글로벌 바이아웃(buyout) 거래 동향



자료 : GLOBAL PRIVATE EQUITY REPORT 2024(BAIN & COMPANY)

고금리 추세 불구, 국내 사모펀드 시장 2023년에도 성장세 지속

→ 2022년 대비, 펀드 수 2.6%(1,098→1,126개),
약정액 8.9%(125.3→136.4조원), 이행액 1.9%(97.1→ 98.9조원) 증가

연도별 국내 사모펀드 수, 약정액 및 이행액 추이



자료 : 2023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5)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전업 운용사(GP) 및 대형 운용사(GP) 강세

→ 2023년 기준 전업 운용사 비중 74.8%, 대형 운용사(GP)의 약정액 비중 64.6%

■ 사모펀드 운용사 구분 및 연도별 구성 비율 추이 (단위 : 사, %)

구 분	'22년 (A)	'23년 (B)	증 감 (B-A)	증감률
전업	312	316	4	1.3
금융회사	46	52	6	13.0
창투계회사*	57	54	△3	△5.3
합계	415	422	7	1.7



참고) 운용사(GP) 수 변화

	2016년	2023년
전업	115	316
금융회사	41	52
창투계	34	54

■ 사모펀드 운용사 규모별 분류 / 규모별 약정액 비중 (단위 : 사, %, %P)

구 분	'22년 (A)	'23년 (B)	증 감 (B-A)	증감률
대형 GP	35	37	2	5.7
중형 GP	160	157	△3	△1.9
소형 GP	220	228	8	3.6
합계	415	422	7	1.7

구 분	'22년 (A)	'23년 (B)	증 감 (B-A)
대형 GP	60.4	64.6	4.2
중형 GP	34.3	30.5	△3.8
소형 GP	5.3	4.9	△0.4
합계	100.0	100.0	-

자료 : 2023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5)

주 : 출자약정액 기준 대형사(1조원 이상), 중형사(1천억원~1조원), 소형사(1천억원 미만)로 구분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기업 구조조정 시장(M&A)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

→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사모펀드의 성장과 대형화에 큰 기여
: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를 위한 M&A → 매매 차익(이윤) 극대화를 위한 M&A

■ 사모펀드 제도 도입배경(2004년)

- 1) 글로벌 사모펀드와 금융당국에 대한 부정적 시선 회피 (혈값인수/먹튀/금융관료개입)
- 2)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이라는 금융정책의 일환

■ 사모펀드 제도 변천사

- 1) 기업구조조정(CRC) 전문회사 → 사모펀드(PEF) 제도 도입(2004년)
- 2)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및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구분하여 규율(2015년)
 - 운용규제 완화 :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
SPC의 다층·복층 구조 설립 허용(차입인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
 - 헤지펀드의 경우 진입규제 완화 및 적격투자자 기준 완화로 라임자산운용사태 유발
- 3) 2021년 '기관전용사모펀드'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일원화된 규제 적용
 - 운용 규제 완화 효과 (레버리지 확대, 지분취득 의무 폐지, 대출 방식의 자산 운용 허용)
 - 주주행동주의 사모펀드 대폭 늘어날 전망

- 미국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 최근연도말 현재 운용자산(AUM) 1.5억불 이상 운용사 보고의무
 - / 20억불 이상 운용사 보다 엄격한 자료 제출 의무 부과
 - / 미국에서 판매되거나 미국인 소유 사모펀드와 운용사에게도 적용
 - / SEC에 보고의무는 있지만,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음

- 미국 ‘볼커 룰(Volcker Rule)’ 2015년 시행 / 트럼프 개정(2020년) 완화
 - 은행 및 은행 계열사의 증권, 파생상품 등 자기계정 거래 방지
 -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와의 특수관계 및 투자를 금지
 - ※ 미국 SEC 2022년 2월 사모·헤지펀드 정보공개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 등
 - 규제강화 방안 제안 ; 공화당 및 대형 PEF 반대로 최종안 미 확정

- 유럽 금융감독청 ‘대체투자 펀드메니저 지침(AIFMD)’ 2014년 시행
 - 사모펀드 투명성 관련 규제 주요 내용
 - ▷ EU 회원국 내 비상장 기업이고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포함한 내·외부와 소통 방식, 향후 경영전략 및 고용과 관련된 영향 등 세부적인 정보를 규제 당국, 주주 및 노동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 ▷ 유럽 내 비상장기업 지분 10%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후 24개월 동안에는 배당, 감자, 자사주 취득 등 구조조정 및 지분 변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지원, 지시, 여타의 절차진행(support, instruct or facilitate) 등도 금지

- ‘사모펀드에게 인수기업은 사실상 현금자동출납기(ATM)’
/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가 ‘토이저러스’ 사례 언급하며 지적
- 사모펀드는 ‘앵글로-아메리칸의 메뚜기들이 퍼뜨리는 역병(plague of Anglo- American locusts)’
/ 독일 사민당 당수였던 프란츠 뮌터페링 사모펀드 폐해 지적인 표현
- 사모펀드는 ‘기업을 헐값에 매입한 후 분할 매각하여 일자리를 빼앗는 기업사냥꾼’
‘수많은 기업을 파산시키고, 일자리를 없앴다’, ‘악랄한 방식과 탈세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 2012년 미 대선 당시 ‘밋 롬리(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 전 대표, 당시 공화당 후보)’ 비판 내용
- 사모펀드는 ‘먹튀 자본’
/ IMF 외환위기 당시 불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내 금융기관을 헐값에 인수한 후, 재 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사세차익을 남겼던 글로벌 사모펀드에 대한 ‘먹튀’ 논란
/ 론스타(외환은행), 칼라일(한미은행), 뉴브리지캐피탈(제일은행) 등

→ 사모펀드는 피인수 기업의 현금이나 자산을 강탈하는 ‘약탈적 기업사냥꾼’

“2012년 미국 대선은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밋 롬니(Mitt Romney)’가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 캐피탈(Bain Capital)의 전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상대 진영과 언론을 통해 사모펀드의 실체적 진실이 잘 드러나는 계기로 작용”

일상을 넘어 사회적 공공재까지 진출한 사모펀드

우리는 지금까지 사모펀드를 뉴스 속의 사건이나 남의 일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 현재 사모펀드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 개입되어 있다. BHC, 노랑통닭, 버거킹, 맘스터치, 아웃백과 놀부 등 수많은 패스트푸드점과 외식업체들, 그리고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 그리고 이 모든 곳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롯데카드까지 모두 사모펀드가 인수한 곳이다. 이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가격은 물론이고 퇴직 후 매월 받게 되는 연금에도 사모펀드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사모펀드는 점차 우리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 / 민주노총 총서 “사모펀드 동향과 쟁점, 노동의 과제” 중

[표1] 맥쿼리 PE의 필수공공재 투자 현황

대상 기업	사업 내용	투자액(억원)	시 기
C&M 등 4개 자산	케이블TV, MBK 컨소시엄	15%	2007
SK E&S(구 SK엔론)	도시가스 8개사 지주회사	49%	2009
WIK그린, 용신산업개발 등	폐기물처리업체 6개사 통합	5,500	2010
동북화학	부두설비, 석유제품저장탱크	1,000	2011
경북 영덕, 영양 풍력발전	풍력발전	1,700	2013
코엔텍, 새한환경, 클렌코	영남권 최대 폐기물업체	1,000	2014
대전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 및 산업단지 병합	375	2015
SK실더스(ADT캡스)	보안업체, 재무적투자	3,200	2019
대성산업가스(DIG에너지가스)	국내 1위 산업용 가스업체	24,000	2019
온산탱크터미널(태영호라이즈)	석유제품 인수·저장·분배	200	2020
LG CNS	정보기술 서비스업체	9,500	2020
덕양(수소)	국내 1위 수소 공급·제조	8,000	2021
S&I코퍼레이션 FM사업부	빌딩관리(디지털플랫폼)	5,000	2021
부산 청사포, 다대포 해상풍력	GIG 해상풍력 복합개발	진행중	2022

→ 패스트푸드와 외식업체, 카드사 등 우리의 모든 일상에 개입한 사모펀드

→ 시내버스와 도시가스 등 필수 공공재 영역까지 침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는 2019년 서울 시내버스 회사 한국비알티(BRT) 인수를 시작으로 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뛰어들었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한 운행 실적을 완수한 뒤 적자가 나면 지자체로부터 적자분을 전액 보전받는다. 지자체는 서비스 품질과 무관하게 기본 이윤을 보장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 이윤도 추가로 지급한다. ‘재정지원으로 업체 부도 등 위험요인이 거의 없고 적자로 운영돼도 적정 이윤이 보장돼 손실이 나지 않는 구조’를 지자체가 만들었고, 사모펀드는 이 구조가 지닌 이점을 노렸다.

차파트너스는 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위해 투자자들을 대거 모집해 총 4개의 펀드(1~4호)를 조성했고, 펀드에 쌓인 돈으로 2024년 4월 기준 총 17곳(서울 6곳, 인천 9곳, 대전 2곳)의 버스회사를 사들여 최대 버스 준공영제 사업자가 됐다. 그리고 2025년 말 일부 펀드(1~3호)의 만기가 다가오자 “안정적이고 장기간 할 수 있는 종류의 투자를 표방”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외국 유력 사모펀드운용사 여러 곳이 매수 의사를 밝혔다. 수년간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뒤 외국 자본을 상대로 엑시트를 앞둔 상황, 차파트너스가 공언한 ‘신념’과 ‘책임감’은 어디로 갔을까.

대기업 집단을 능가하는 사모펀드의 자금 동원력 및 사업규모

→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IMM 인베스트먼트' 준대기업집단 지정

〈표3-9〉 사모펀드의 폐기물처리 업체 진출 현황 (단위 : 억원)

인수자	대상기업	통합업체	매매가	인수
어펠마캐피탈	EMC홀딩스	와이에스텍 등 7개	15,000	2017
앵커에쿼티	ESG	의료폐기물업체 6개	9,000	2017
IMM인베스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	폐기물업체 11개	3,900	2017
IS동서-E&F	코엔텍, 새한환경	폐기물업체 2개	5,000	2020
VIG파트너스	바이오에너지팜아산	축산,음식물처리1개	10,000	2021
케펠인프라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	비노텍 등 6개	7,700	2022

자료 : 각 언론사 및 업계

〈표3-19〉 인터넷전문은행 사모펀드 주요 투자자(단위 : 억원)

은행	투자자	투자금액	시기
카카오뱅크	TPG 캐피탈	2,504	2020
	앵커 에쿼티파트너스	2,504	
	베인캐피탈 크레딧	2,000	
케이뱅크	MBK파트너스 SS펀드	2,000	2021
	MC파트너스 및 토닉PE	1,500	
	JS PE 및 신한대체투자운용	1,250	
토스	알캐온캐피탈 및 라이트스트리트	1,050	2021

자료 : 각 언론사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보면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인베스트먼트'가 새롭게 지정됐는데, IMM은 2019년 기준 79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자산총액이 6조원을 넘어서, 사모펀드 운용사로는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것이었다. 'MBK · 한앤컴퍼니 · IMM' 등 국내 사모펀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위 3개 사의 경우, 자산 기준으로 '삼성 · 현대차 · SK · LG · 롯데' 등 기존 재벌 대기업 집단에 이어 거대 기업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에서의 자금 조달 능력과 영향력만 놓고 보면, 이미 5대 그룹을 능가하고 있다.

/ 민주노총 총서 "사모펀드 동향과 쟁점, 노동의 과제" 중

또 최윤범 손든 法...고려아연 "MBK에 속은 주주들 손해 봐"(종합)

/ 뉴스1 (2024.10.21)

2차 가처분신청도 기각...명분 앞선 崔, 주총 '캐스팅보트' 국민연금 설득 힘 실릴 듯
MBK "가처분 기각 아쉬움...회사 재무·주주 피해 본질 변함 없어"

공공 사업부문의 특성(정부지원, 독점권 등)을 악용, 최대한의 이익 추구

- 준공영제 시내버스 사업을 장악한 사모펀드
 - 경기도는 사모펀드가 버스노선 운행차량의 80% 장악
 - 영업손실을 공공재원으로 보전하여 주주이익 극대화, 차고지 매각·비수익 노선 운행 중단 등 공공성 후퇴
 - 운행거리가 늘어나는 등 노동권도 악화
 - 특히 차트너스는 소규모 운수회사들을 인수하여 통합·대형화
(준 공영제 시행지역을 중심으로 16개 회사 인수,
준공영제 버스사업자 1위. 2022년 1 ~ 8월 지급된 준공영제 지원금이 1,564억원)
- 도시가스 사업의 특성(특정지역 독점, 정부지원 등)을 전격 활용하는 사모펀드
 - 맥쿼리 자산운용 2021년 해양에너지, 서라벌 도시가스 인수
(해양에너지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독점 도시가스 공급, 2021년 11% 요금인상 요구로 광주시와 논란 야기,
광주시민사회 및 노동단체 반대입장 표명, 광주시는 산업부에 도시가스 영업 양수도시 시·도지가 인가토록 제도 개선 추진)
 - 도시가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2022년) : 배관건설자금(262억원), 안정관리자금 20억원, 시설 개선자금 대출 4% 적용
- 사모펀드의 폐기물 처리 업체 인수로 독과점 형성, 폐기물 처리단가 상승 등으로 국민 부담 증가
 - 소규모 영세기업이 난립되었던 폐기물 처리산업에 사모펀드 진출
(어펄마캐피탈 7개, 앵커에쿼티 6개, IMM인베스트먼츠 11개 인수 등)
 - 지자체는 생활 폐기물 소각 및 매립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바, 독과점 형성에 따른 처리단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 증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사모펀드 차입인수(LBO) 사례

→ 이자부담으로 파산한 토이저러스, 미국 소매업의 연쇄 파산 사태

- 연 이자 비용만 4억달러에 달했던 토이저러스
 - 2005년 사모펀드 베인 캐피탈과 KKR 등이 공동 인수
 - 총 66억 달러의 인수비용 중 50억 달러를 차입 인수
 - 영업이익의 97%를 이자로 지불
(연 4억 달러에 달하는 이자 비용)
 - 2017년 9월 파산보호신청
 - 2018년 6월 청산 결정, 33,000 여개의 일자리 상실
 - 비판 여론에 굴복 2천만 달러의 퇴직수당 기금 조성
- 2012~2019년 총 14개 대형 소매체인 파산보호 신청
 - 이 중 10개가 사모펀드 소유 기업
- 소매체인업 대량 폐점 사태(2019년 1분기)
 - 33개 소매 체인업에서 6,683개 매장 폐쇄
(폐쇄 매장의 70%가 사모펀드 소유)
- 소매업 중 사모펀드 인수기업 고용 변화 조사 결과(2005~2019)
 - 조사기업 83개 업체 중 35개(약 42%) 기업 파산보호신청
 - 521,175개 일자리 순 감소

/ Carrol & Yozzo(2018), Baker et. al.(2019) 등

IMF 외환위기 상황을 악용,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대한 ‘먹튀’ 행각

- 사모펀드의 은행 인수자격부터, 금융관료들의 개입과 불법행위 여부까지 사회적 논란
- 은행의 사회적 역할 약화되는 동시에 주된 경영 목표가 ‘이윤 극대화’로 변화되는 계기로 작용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 (매각차익 4조 7000억원)
 - 한국정부 매각 승인 지체에 대한 6조원 손해배상 소송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
(손해배상금 2억 1,650만달러, 2011년 12월 이후 지연이지 지급 판정)
- 사모펀드 칼라일 2000년 한미은행 인수 2004년 씨티그룹에 매각 (매각차익 7000억원)
- 사모펀드 뉴브리지캐피탈 1999년 제일은행 인수 2004년 SC은행에 매각 (매각차익 1조 1500억원)

* 참고 : 외환, 제일, 한미은행 공적자금 투입금액 (단위 : 억원)

시중은행	1997	1998	1999	2000	2001	02~04	정산	지원총계
외환은행	6,666	9,747	2	2,542	884	0	2,832	22,673
제일은행	16,696	21,066	86,711	34,704	6,601	13,432	-2,660	176,550
한미은행	218	23,233	8,502	561	0	0	449	32,963

자료 : 재경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2005)

차입인수(LBO)의 전형적 폐해를 보여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

→ **인수자금 7조 2천억 중 차입금 5조원 홈플러스 전가**

(4조 3천억 차입 + 7천억 상환전환 우선주 발행 / 전형적 차입인수(LBO) 사례)

→ **이자비용 1조 2,635억(2016~2019년) / 자산매각 4조 6,710억(2016~2022) / 배당금 1조 2천억(2016~2018년)**

→ **매장감소 8개점(2016년 142개 → 2022년 134개) / 인력감축 -10,828명**

■ 홈플러스 자산 매각 현황 (단위 : 억원)

시기	내 용	매각금액
2016	서대전 잔여지 매각	60
2016	가좌, 김포, 김해, 동대문, 복수원점 세일앤리스백	1,167
2017	목포 상동 부지 매각	5,035
2017	남양주 별내 부지 매각	689
2017	강서점 세일앤리스백	2,150
2017	킨텍스점 부분매각 등	155
2018	의정부점, 울산남구점 등 세일앤리스백	3,672
2018	함안 물류센터 세일앤리스백	750
2018	부천 중동점 매각	950
2019	칠곡 IC 부지 매각	130
2019	무의도 연수원 매각	1,200
2019	인하점, 대전문화점, 전주완산점 세일앤리스백	3,150
2020	울산점(중구), 구미점, 시화점 세일앤리스백	3,003
2020	대구 스타티움점 매각	no
2020	대전 둔산점 매각	3,840
2020	대구점 매각	1,279
2020	대전 탄방점 매각	3,000
2020	안산점 매각	4,300
2021	부산 가야점 매각 (2022.1 미래형 마트로 재입점)	3,510
2021	동대전점 매각	3,000
2022	연산점, 해운대점 매각	4,000
2022	안성 신선물류센터	1,670
합 계		46,710

자료 : 마트노조(2022)

■ 홈플러스 인력감축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	2022	인원 변화
직접고용	26,477	20,717	-5,760
간접고용	8,112	3,044	-5,068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공시 각 년도

■ 홈플러스 배당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당기순이익	3,232	2,536	1,762	-5,382
배당	6,035	4,882	1,214	1,715 ¹⁰¹⁾

자료 : 금감원 공시자료 각 년도

■ 김병주 회장 순자산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산	8,100	11,135	11,135	17,661	22,286	41,000

자료 : 포브스글로벌, 포브스코리아

사모펀드의 악랄한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조합의 투쟁 장기화

→ 2022.02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 일부 성과 도출했지만, 투쟁은 현재 진행형

- 무리한 인력감축으로 따른 노동자의 노동권 악화
 - 무리한 인력 감축과 강제 전환 배치, 통합 부서 운영 등
 - 고된 육체노동과 최저임금, 명절 및 공휴일 근무
 - 감정노동 심화에 따른 노동자의 정신적 고통 가중
 - 2년여에 걸친 흑자매장 매각 저지 투쟁으로 고용안정 협약 쟁취 성과
 - ; 최근 투자회수(Exit)위한 분할 매각 움직임으로 투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 다양한 매장 매각 저지 투쟁 전개 :
 - 기자회견, 지자체 용적률 개정, 집회 및 농성, 서명운동, 고소고발, 제도개선 요구, 삭발투쟁, 지역사회 연대투쟁
 - 운용사(MBK) 릴레이 상경 투쟁, 사모펀드 투자자(국민연금 및 캐나다연기금) 압박 투쟁 등
 - 협약서 주요 내용 :
 - 매각 부지에 판매 시설을 건축하여 마트 매장 운영하여 고용승계, 건축 기간 생계비 지급,
 - 이후 전체 흑자매장 매각에 적용 등
- 참고사항 : MBK파트너스는 한국계 사모펀드 운영사이나 홈플러스에 투자한 블라인드 펀드3은 캐나다 등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대부분으로 홈플러스는 외투기업으로 분류

사모펀드와의 끈질긴 악연에 맞선 ‘애큐온저축은행’ 노동자

→ 사모펀드로의 매각만 4번째, 다음은 어디로(?)

한솔저축은행 → 2003년 미국계 펀드(PPRF) → 2006년 MBK파트너스 →
2015년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 → 2019년 홍콩계 사모펀드 베어링PEA

→ 상존 이슈 : 고용안정, 정당한 보상, 사모펀드로의 매각 반대

그리고 재무구조 및 수익성 개선의 가장 큰 공로자는 노동자들이었다. 2016년 3.30%에 달했던 총자산경비율¹⁾은 2022년 1.16%로 -64.8%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총자산경비율은 총자산에서 총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경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통 인건비이기 때문에, 총자산경비율이 큰 폭 하락했다는 것은 인건비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애큐온저축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7기	제38기	제39기	제40기	제41기	제42기
당기순이익	7,453	8,679	23,456	1,991	41,659	9,038
구분	제43기	제44기	제45기	제46기	제47기	제48기
당기순이익	21,348	57,254	30,083	10,534	25,276	17,565
구분	제49기	제50기	제51기	제52기	합계	
당기순이익	28,059	27,868	62,093	57,322	429,678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2016년부터 12월 결산으로 변경)

실제로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애큐온저축은행 노동자 수는, 2012년 806명에서 2022년 379명으로 427명(-53%)이나 줄었다. 인적 구조 조정에 따른 경비 절감과 노동 강도 심화라는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이 있었기에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이었다. 황당하게도 해당 기간 임원은 14명에서 20명으로 33.3%나 늘어났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조차 부정하는 자본의 행태는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대표이사는 교섭 과정에서 “늘 주던 대로 줄 수밖에 없다. 돈은 기체가 더 벌어다 준 것이다. 성과금은 주주사가 내려주는 시혜니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하게 받아야 한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교섭이 파행적으로 굴러가면서, 2022년 임단협은 2023년까지 이어졌고,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 결의대회와 경고 파업으로 대응하는 등 강력한 투쟁으로 2022년 임단협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 민주노총 총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및 노동의 대응” 중

노동자 희생의 대가로 재무구조 및 수익성 대폭 개선, 그 대가는 지속적인 인력감축과 고강도 노동

- 총자산경비율 **-64.8% 하락** (2016년 3.30% 년 1.16%)
- 당기순이익 : **534.8% 증가** (2012년 90.3억원 → 2022년 573.2억원)
- 직 원 수 : **-53.0% 감소** (2012년 806명 → 2022년 379명)

■ 애큐온저축은행 주요 수익성 지표 추이 (단위 :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회계연도가 12월 결산으로 바뀐 2016년 이후 자료).

■ 애큐온저축은행 당기순이익 및 직원 수 추이 (단위 : 백만원, 명)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전자공시시스템 각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주) 직원 수는 당해연도 12월말 기준이며, 당기순이익은 제42기~제52기 회계연도 기준.



2. 외국인직접투자 실태 및 주요 사례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이 경영참가나 기술 제휴 등을 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외투기업에 해당

→ 외투기업의 자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등은 외투기업은 아니나 외국자본의 영향력은 동일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나 기술 제휴 등을 통해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¹⁾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①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②5년 이상의 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③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④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에 의한 외국인투자, ⑤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하는 것 등이다.

/ 민주노총 총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및 노동의 대응” 중

■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지원제도

구 분		외국인투자기업		
		외투지역	신성장기술수반	경제특구
목 적		외투유치		
근 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세 제 지 원	법인세	(단지형) 3년 100%+2년 50% (개별형) 5년 100%+2년 50%	5년 100%+2년 50%	3(5)년 100% + 2년 50%
	관세	5년 100%(자유무역지역 면제)		
	지방세	법인세와 대상 · 요건 동일(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 지원 가능)		
	입지지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임대료 감면 등		
현금지원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한도 내 국비 · 지방비 매칭 지원		

자료) 이호준(2018)

주) 2019년 1월부터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 기존 기업들의 권리는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기업 정보' 검색을 통해 외투기업 여부 확인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 정책정보 ⇒ 외국인투자기업정보 ⇒ 회사명으로 검색

홈 > 정책·정보 > 통계정보 > 외국인투자기업정보

외국인투자기업정보

전체 : 1건

회사명	회사명(영문)	대표투자국가	주업종
홈플러스주식회사	Homeplus Co.,Ltd.	캐나다	대형마트

회사명 클릭

회사명

조세피난처를 통한 우회투자 여부 확인 가능

외국인투자기업정보 - 회사 - Microsoft Edge

https://insc.kisc.org/motie/cor2/cor_view.jsp?corp_id=K0310819&k_n...

외국인투자기업기본정보

MASTER COMPANY INFO 산업통상자원부

회사명(한글)	홈플러스주식회사
회사명(영문)	Homeplus Co.,Ltd.
업체유형	법인기업
전화번호	025285200
우편번호	07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등촌동 홈플러스강서점엔본사사옥) 398
표준산업종분류명	도·소매(유통)
표준산업분류명	대형 마트 (47112)
외투기업 최초등록일자	2021년03월19일
대표업종	대형마트사업
대표투자국가	캐나다

☒ 닫기

IMF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외자유치에 대한 그릇된 신념

→ ‘외자유치만이 살 길’ ; 타당한 신념인가? 긍정적 효과는 충분했나?

-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1971년 외국인투자 신고건수 126건, 신고금액 4천만 달러 → 2022년 신고건수 3,462건, 신고금액 304.5억 달러

- 2023년 3월 9일 에쓰오일 사인 프로젝트 기공식 윤대통령 발언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 문제 제기

‘외자유치만이 살길?’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 기술 획득 등 외자유치의 긍정적 효과는 충분한가?

법인세가 높아 외자유치 어렵다는 세간의 평가는 타당한 것인가?

외국인투자 기업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시스템 있는가?

외국자본의 진입부터 철수까지 모니터링과 분석, 피드백 과정은 있었는가?

분석결과 드러난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있었는가?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지역(국가)·산업별 통계자료 및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 등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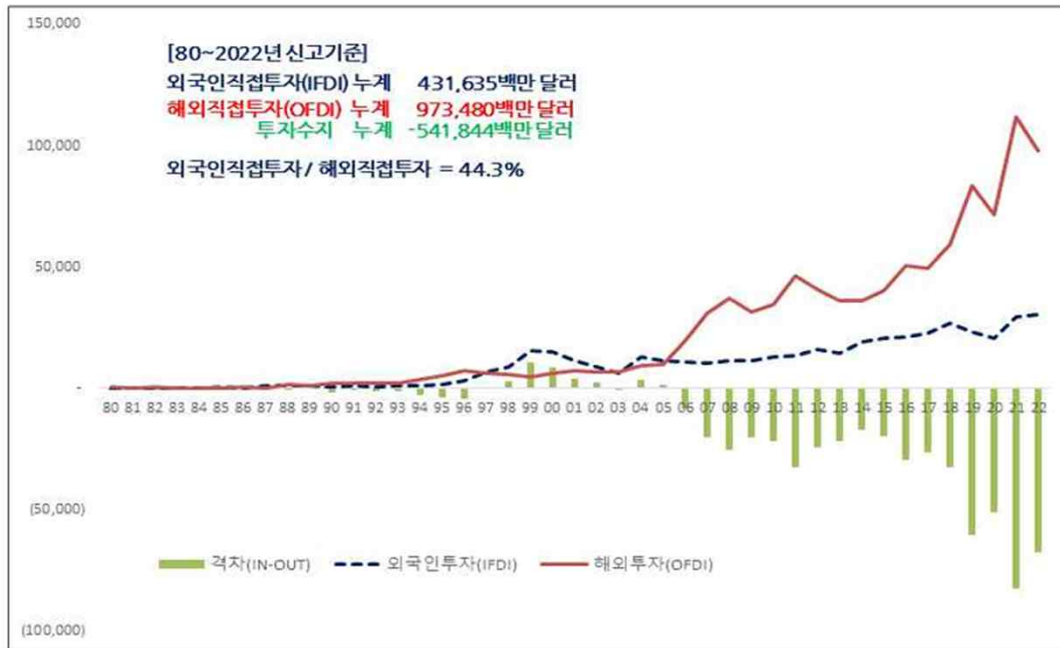
외자유치보다 더 중요한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문제, 전략과 관리의 부재 노출

→ 수리적 결과에 집착한 외자유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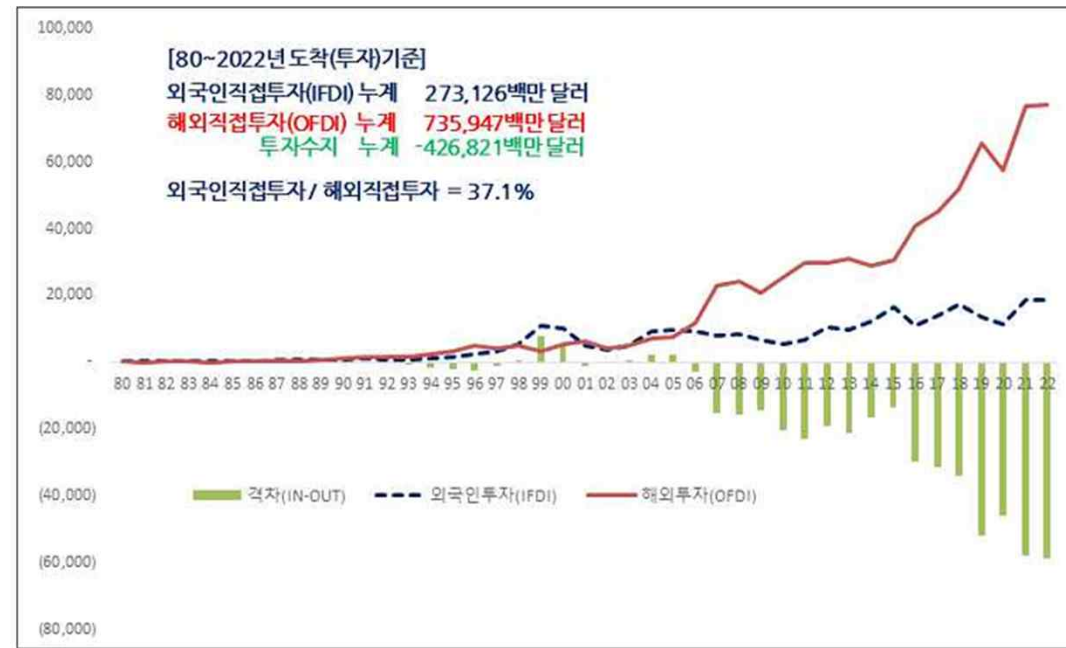
- 외국인직접투자보다 해외직접투자가 2.7배나 더 많았다. (IFDI < OFDI)
 - 투자수지 불균형 심화, 외자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자본의 재투자 유도 방안
-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늘었지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축소되고 있었다.
 - 년 기준 국가 전체에서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 10.6%, 고용은 5.6% (고용 창출?)
- 법인세나 경제 규모가 외자 유치의 절대 조건은 아니었다.
 - OECD 국가 중 우리보다 법인세가 높지만 FDI 유입 더 많은 나라 다수, 2019년 법인세 논쟁 사례
- 제조업 투자 비중 줄고, 국가별로 '투자약속 준수율'이나 투자 규모, 자본철수 현황 모두 달랐다.
 - 모니터링과 분석, 피드백을 통한 개선 노력이 부족함을 반증
-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우회투자와 사모펀드 투자가 급증하고 있었다.
 - 사실 관계 확인은 물론 기본적 통계조차 없는 현실

외국인직접투자 (Inward FDI) <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 Inward FDI 및 Outward FDI 추이 / 신고기준 (단위 : 백만달러)



■ Inward FDI 및 Outward FDI 추이 / 도착기준 (단위 : 백만달러)



■ 연대별 투자수지 추이 / 신고기준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80~90년	91~00년	01~2010년	11~2020년	21~2022년
누 계	-1,901	10,119	-84,966	-315,089	-150,009
연평균	-173	1,012	-8,497	-31,509	-75,00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수출입은행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자 산출.

주) 투자수지는 외국인직접투자(IFDI)에서 해외직접투자(OFDI)를 차감한 값을 의미.

■ 투자약속 준수율(도착액/신고액)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신고기준(A)	도착기준(B)	투자약속 준수율(B/A)
외국인직접투자	431,635	273,126	63.3%
해외직접투자	973,480	735,947	75.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23.05 검색기준)

주) 1980~2022년까지의 누계금액. 투자약속 준수율 = 도착액/신고액 * 100

통계분석 결과 법인세가 높아 외자유치가 어렵다는 주장은 잘못된 사회적 통념

1. 2019년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 사례

- 2017년말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
- 전경련 및 보수언론 : “외국인투자 크게 감소할 것”

→ 외국인직접투자 세계적 추세보다 한국이 더 양호

■ 최근 5년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한 국	신고액	26,902	23,328	20,747	29,513	30,454
	증가율	17.2	-13.3	-11.1	42.3	3.2
	도착액	17,514	13,449	11,488	18,690	18,537
	증가율	26.7	-23.2	-14.6	62.7	-0.8
세 계	유입액	1,375,437	1,707,830	961,983	1,478,137	1,294,738
	증가율	-16.4	24.2	-43.7	53.7	-12.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UNCTAD(2023).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며, 세계 통계자료는 FDI inflow 기준임.

2. 법인세와 외국인직접투자 국제비교

- 한국 법인세율 24% OECD 국가 중 공동 13위
- 법인세가 우리보다 높지만,
외국인투자 유입 더 많은 나라 다수
- 한국은 GDP 대비 FDI 비중 취약

→ 경제규모나 법인세가 외자유치의
절대조건은 아니었음.

■ 주요국가 법인세율 및 FDI 현황 (단위 : 십억달러, %)

구 분	호주	프랑스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한국
FDI inflow	62	36	35	35	20	20	18
FDI outflow	117	48	-	39	-	-	66
법인세율	30.0	25.83	30.0	25.0	24.0	27.0	24.0
IFDI/GDP	3.7	1.3	2.5	2.5	1.0	6.6	1.1
GDP	1675	2782	1414	1397	2010	301	1665

자료) FDI inflows(UNCTAD), 법인세율(OECD.stat), GDP(Trading Economics)

주1) FDI 및 GDP는 2022년 기준이며, 법인세율은 2023년 7월 검색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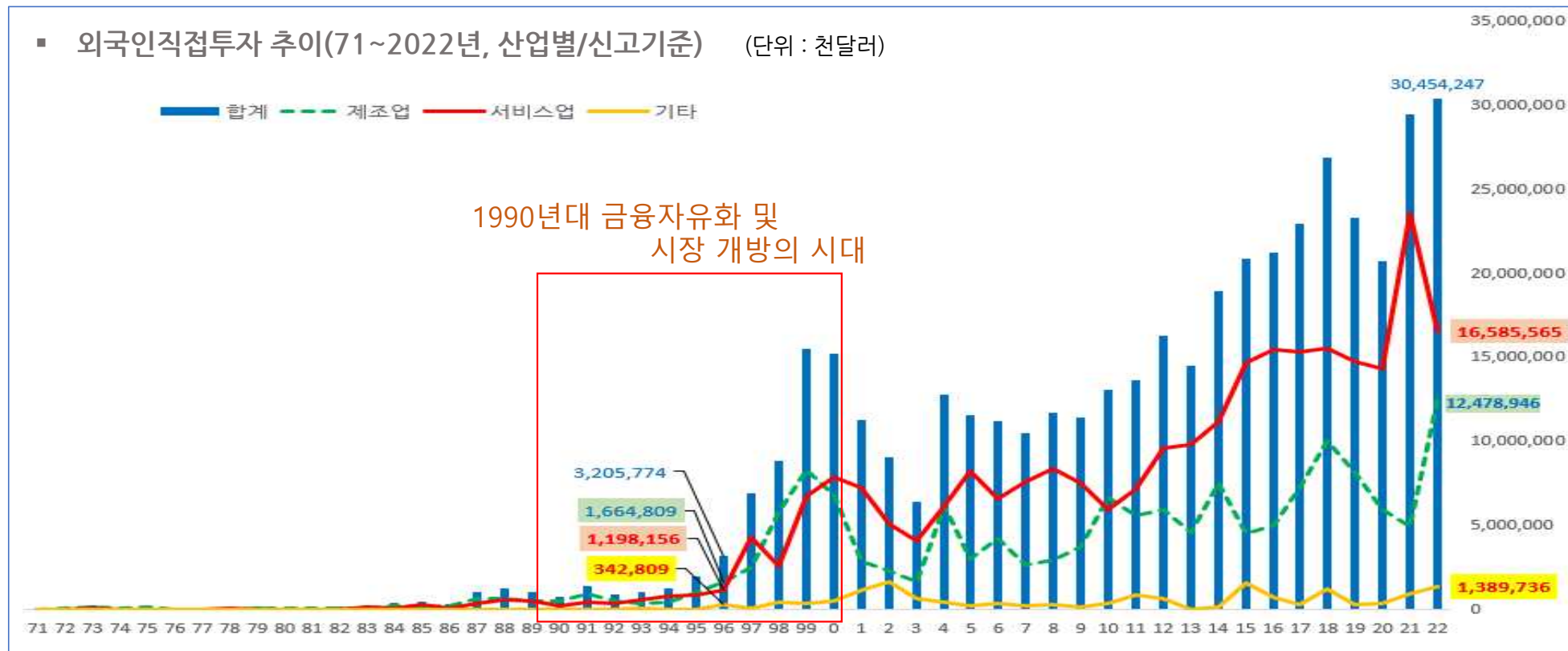
주2) 멕시코, 이탈리아, 칠레의 FDI 유출은 상위 20개국 밖으로 통계치 없음.

‘금융자유화 및 개방의 시대’였던 1990년대 들어 유의미한 움직임. 2020년대 지속 증가

→ 91~95년(연평균 증가율 26.1%) / 96~2000년 (연평균 증가율 56.2%)

→ 2020년대(2021~2022년) 들어서도 외국인 투자 증가 추세 지속 / 세계적으로 하락 추세와 대비

■ 외국인직접투자 추이(71~2022년, 산업별/신고기준) (단위 :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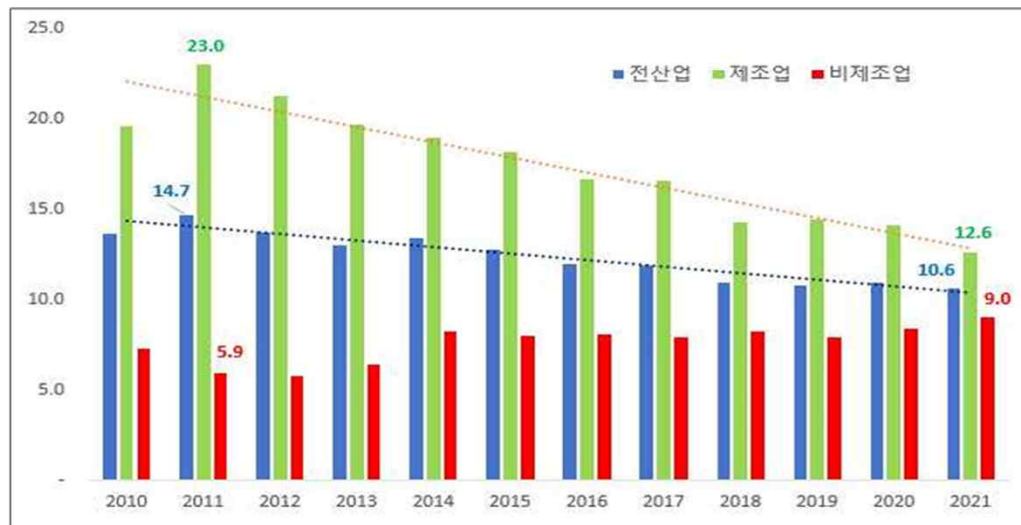
외자유입 규모의 지속적 상승 불구, 매출 및 고용 비중 지속 감소

→ 국가 총 매출 대비 외투기업 매출 비중 하락 ; 2011년(14.7%) 년(10.6%)

→ 국가 총 고용 대비 외투기업 고용비중 하락 ; 2010년(6.3%) 년(5.5%)

2021년 기준 외투기업 매출 비중은 10.6%, 고용비중은 5.6%로 고용창출 효과 매우 부족

■ 외투기업 매출 비중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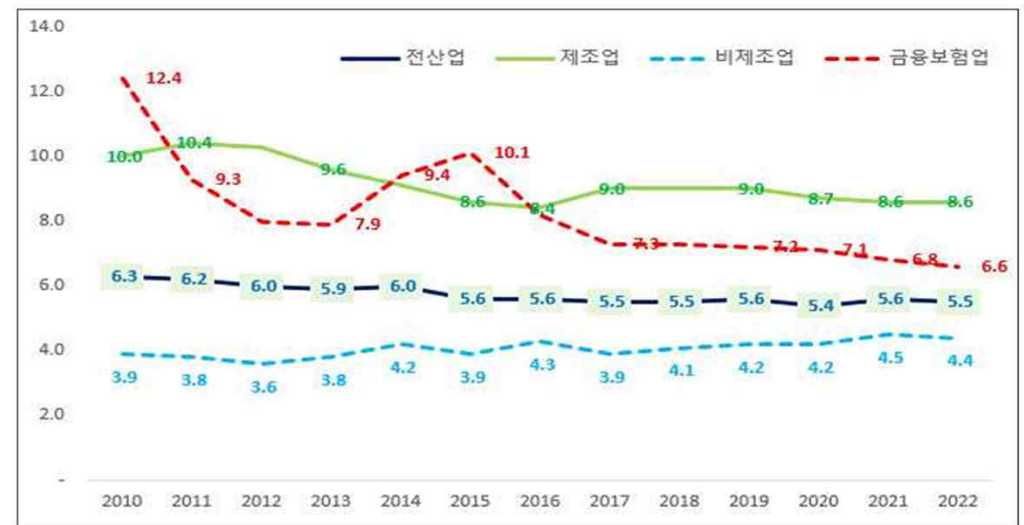


전산업 : 2011년(14.7%) → 2021년(10.6%) ▽27.9%

제조업 : 2011년(23.0%) → 2021년(12.6%) ▽45.2%

비제조업 : 2012년(5.8%) → 2021년(9.0%) △55.2%

■ 외투기업 고용 비중 추이 (단위 : %)



전산업 : 2010년(6.3%) → 2022년(5.5%) ▽12.7%

제조업 : 2011년(10.4%) → 2022년(8.6%) ▽17.3%

비제조업 : 2012년(3.6%) → 2022년(4.4%)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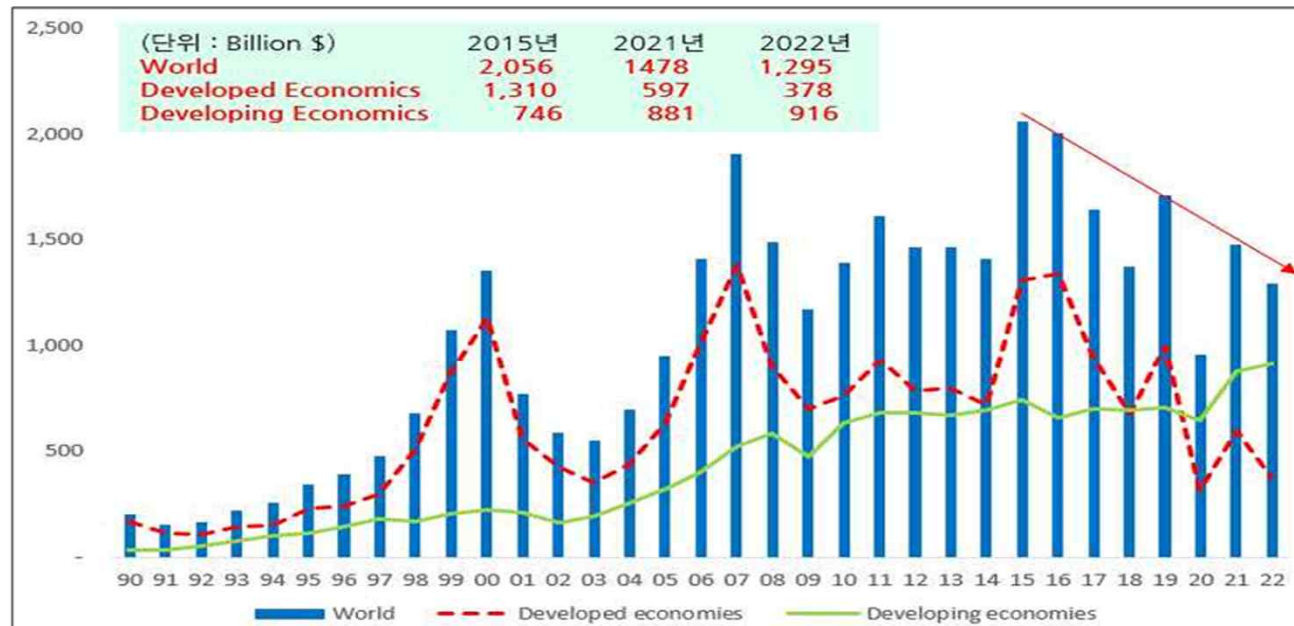
금융보험 : 2010년(12.4%) → 2022년(6.6%) ▽46.8%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FDI, inflows) 2015년을 정점으로 추세적 하락 흐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호주의 강화 : G2(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경험 : 자국 우선주의 및 규제 강화
- 우크라이나 전쟁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 경기침체와 부채축소 압력 가중

외국자본의 일방적
철수문제와 연관

■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단위 : 십억달러)



자료 : UNCTAD 'FDI Data Explorer'(23.08 검색 기준)

주) 카리브해 금융 중심지 및 보고국의 특수목적법인 제외. 자산/부채 기준.(이하 상동)

국가안보 및 기술 유출 방지 명분, 투자 심사 강화 및 제재수단 확보

- 미국 : 2018년 '외국인투자현대화법(FIRRMA) 시행, 투자심사 강화
미국기업 인수합병 시 직권 조사 가능
- 중국 : 2020년 시행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중국기업 M&A 심사 의무화
- 일본 : 2019년 이후 외환법 개정, 5G 투자촉진제 도입
2020년부터 사전신고 면제제도를 운영, 신고 의무 기준에 차별을 두는 한편, 사전신고 기준도 강화
- 영국 : 2021년 4월 '국가안보 및 투자법' 제정,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

“우리나라는 아직 유효한 정책적 제재수단이 없는 상태로. 심사대상과 신고 절차도 선진국은 직권조사 개시 등 실효적으로 안보심사가 가능하나, 우리는 직접적 조사가 어렵고 심사기준도 취약. 더구나 우리나라 법률은 제3국을 통해 들어오는 간접투자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바, 원투자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 통제 방안 구축도 시급함.”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으로 외투기업 철수 급증, 사회적 문제로 대두

2018년 2월 한국GM 일방적 공장 폐쇄 / 2020년 6월 한국게이츠 사업철수 일방 통보

2022년 7월 한국와이퍼 일방적 청산 발표 /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 일방적 청산 결정

→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장기투쟁과 언론보도에 따른 사회적 이슈화

노동조합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중 77.4%(2022년 기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외투기업들

■ 산업별 외국인투자기업 철수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개, %)

구 분	도착기준 누계 (71~2021년)		2021년 말 현존		철수 누계(71~2021)			
	업체수	도착 금액	현존 기업수	현존 금액	업체수	비중	철수 금액	비중
전 체	38,893	255,777	15,257	159,669	23,636	60.8	96,108	37.6
제조업	8,531	98,079	3,468	57,536	5,063	59.3	40,543	41.3
비 제조업	29,324	93,649	11,296	65,941	18,028	61.5	27,708	29.6
금융 보험	1,323	64,049	493	36,192	830	62.7	27,857	43.5

자료) 산자부 통계자료(23.09검색) 및 경영실태조사분석(2022) 자료에 의거 저자 산출.

주1) 비제조업의 경우 산자부 외국인투자 통계 중 다음의 산식에 의거 산출함.

(비제조업 = 서비스업 + 농축수산물업 +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 금융보험)

주2) 철수 업체수 및 금액 = 도착 업체수 및 금액 누계액 - 2021년말 현존 기업 및 금액

✓ 연평균 철수 업체 수 최대 463개
(동일업체에 중복 투자 및 소수 지분투자 고려)

✓ 철수 업체 수 비중 > 철수금액 비중
(투자규모 적은 기업의 철수가 많았던 결과)

✓ 국가별 철수 현황을 보면
중국(69.2%) 및 미국(64.7%) 철수비중 ↑

→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역경제 등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재수단은 전무

연대별 '투자약속 준수율' 하락 추세, 국가별로도 준수율 및 투자규모 큰 편차

→ 외국인직접투자 평가관리시스템(정보의 수집·분석·평가·개선) 및 전략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

- 연대별 FDI '투자약속 준수율(= 도착금액/신고금액)' 지속적 하락 추세
70년대(79.8%) → 80년대(73.8%) → 90년대(66.0%) → 00년대(64.5%)
→ 10년대(61.8%) → 20년대(62.1% / 21~22년)
- 국가별 준수율 큰 편차 : 중국(35.3%)·미국(41.5%)은 낮고, 네덜란드(88.8%)·영국(82.8%)은 높음
- 총 외국인투자에서 상위 11개국 비중 80.4%(신고기준)로 소수 국가에 집중. 높은 조세피난처 비중
- 국가별 업체당 평균 투자규모(도착기준)도 큰 편차, 투자규모가 큰 건은 대개 조세피난처를 경유
전체 평균(6.6백만\$), 중국(0.9백만\$), 홍콩(4.9백만\$), 몰타(180.2백만\$), 케이먼(20.4백만\$) 등
- 2021년 현존 투자 기준 국가별 평균 투자액 및 고용 규모도 큰 편차
전체평균 (10.5백만 달러, 53.0명) / 중국(2.7백만 달러, 4.5명)과 홍콩(8.4백만 달러, 31.1명)

■ 국가별 업체당 평균 투자액/누계·도착기준 (단위 : 천달러)

구분	전체평균	미국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몰타
금액	6,632	6,734	4,976	39,486	13,775	180,225
구분	영국	독일	케이먼	홍콩	프랑스	중국
금액	19,557	13,131	20,381	4,897	15,071	88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자료(23.05)에 의거 저자 산출

■ 현존투자 상위 10국 평균 투자액 및 고용 (단위 : 백만달러, 명)

구분	일본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몰타	독일	홍콩	중국	프랑스	전체
평균 투자액	8.1	9.0	18.3	34.7	33.2	238.6	16.0	8.4	2.7	24.5	10.5
평균 고용	78.3	58.9	82.8	137.2	81.4	927.8	56.3	31.1	4.5	77.5	53.0

자료) 산자부 '2022년 경영실태조사분석' 자료에 의거 연구자 산출.

2000년대 이후 서비스업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급증 추세

→ 제조업 비중 낮아지면서, 건당 투자 규모는 물론 고용 창출 효과 하락

■ 산업·연대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신고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보험]	기타	합계
70년대 (71~80)	연평균	99	42	[11]	8	149
	비중	66.6	28.0	[26.0]	5.4	100.0
	증가율	-	-	-	-	-
80년대 (81~90)	연평균	348	253	[53]	16	616
	비중	56.4	41.0	[21.0]	2.7	100.0
	증가율	250.8	505.9	[389.5]	105.5	314.5
90년대 (91~00)	연평균	2,860	2,590	[638]	197	5,647
	비중	50.6	45.9	[24.6]	3.5	100.0
	증가율	723.0	925.3	[1,102.4]	1,105.1	816.0
2000년대 (01~10)	연평균	3,637	6,716	[2,586]	573	10,926
	비중	33.3	61.5	[38.5]	5.2	100.0
	증가율	27.2	159.3	[305.6]	190.7	93.5
2010년대 (11~20)	연평균	6,485	12,820	[4,286]	659	19,963
	비중	32.5	64.2	[33.4]	3.3	100.0
	증가율	78.3	90.9	[65.8]	14.9	82.7
2020년대 (21~22)	연평균	8,741	20,077	[5,646]	1,165	29,983
	비중	29.2	67.0	[28.1]	3.9	100.0
	증가율	34.8	56.6	[31.7]	76.9	50.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자료(23.05)에 근거하여 연구자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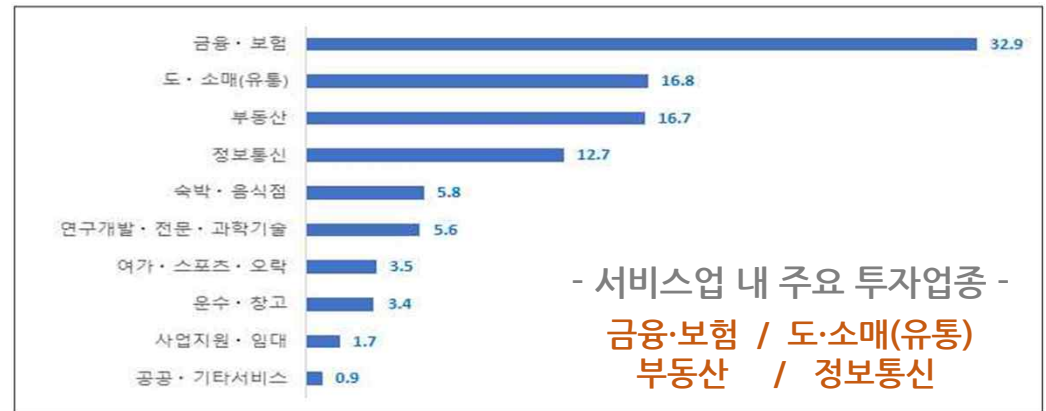
주1) 연평균은 해당 연대 투자 누계금액을 연평균 한 수치임

주2) 금융·보험업의 경우 서비스업 내 비중이며, 증가율은 전 연대 대비 증가율임.

■ 산업별 건당 투자액(71~22년) /신고·누계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신고건수	신고금액	비중	건당 투자액
전체	82,544	432,979	100.00	5.2
제조	20,720	151,765	35.05	7.3
서비스	59,776	264,351	61.05	4.4
[금융보험]	[4,044]	[87,022]	[32.92]	21.5
전기가스 등	1,585	16,178	3.74	10.2
농축수산업	463	685	0.16	1.5

■ 서비스업 내 업종별 투자 비중/신고기준 (단위 : %, 서비스업=100)



외국인직접투자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우회투자 급증 추세

70년대(6.4%)

년대(43.8%) / OECD 주도 글로벌 디지털세 유예로 증가세 지속될 전망

연대별 FDI 상위 10국 중 조세피난처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70년대 (71~80)	80년대 (81~90)	90년대 (91~00)	00년대 (01~10)	10년대 (11~20)	20년대 (21~22)
국가 [금액]	홍콩 [28] 네덜란드 [26] 파나마 [23] 스위스 [18]	스위스 [224] 홍콩 [193] 네덜란드 [171] 싱가포르 [58]	네덜란드 [8,468] 말레이시아 [5,082] 싱가포르 [2,093] 케이만 [1,574] 버뮤다 [1,492]	네덜란드 [11,371] 싱가포르 [4,537] 홍콩 [2,753]	싱가포르 [15,827] 몰타 [15,483] 홍콩 [14,239] 네덜란드 [11,998]	싱가포르 [7,437] 네덜란드 [5,897] 몰타 [5,855] 케이만 [5,253] 아일랜드 [1,852]
소계	95	647	18,709	18,661	57,547	26,293
비중	6.4	10.5	33.1	17.1	28.8	43.8
전체	1,487	6,165	56,471	109,258	199,632	59,967

자료) 산자부 통계자료(23.05 검색)에 의거 연구자 산출.

주) 소계는 연대별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중 조세피난처 투자액을 합산한 값이며, 비중은 해당 연대 총 투자액(전체)에서 조세피난처가 차지하는 비중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 : 역외 탈세 구조

'Double Irish Dutch Sandwich'

다양한 형태의 법인을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후 자회사 인위적 재배치

OECD '글로벌 디지털세 필러1 도입'

2025년으로 또 다시 1년 유예

본 디지털세는 OECD 주도로 실제 매출을 올린 나라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

조세피난처 분류

구 분	주요 내용
Low Tax Havens	저세율국. 세율이 낮고 비교적 많은 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배당에 대한 원천과세가 없다. 바레인, 모나코, 싱가포르 등
Tax Shelters	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국가.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등
Tax Resorts	특정한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활동에 특별한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취하는 국가.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Tax Paradise	면세국,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조세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설립이 간단하다.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등

‘M&A형’ FDI의 높은 비중(도착기준) / 글로벌 M&A 시장에서도 사모펀드 비중 증가

→ 사모펀드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관계부처 관련 통계자료는 전무)

■ 외국인직접투자 중 ‘M&A형’ 비중 추이 (단위 : %)



■ 그린필드형 및 M&A형 비중(2010~2022) (단위 : 억달러, %)

구 분	신고기준		도착기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그린필드형	1,915.8	70.3	976.6	59.7
M&A형	811.1	29.7	658.6	40.3
합 계	2,726.7	100.0	1,634.9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동향 각 년도 자료에 의거 연구자 산출.

주) 투자금액 및 비중은 2010년부터 2022년 투자 누계금액 기준임.

도착기준(실 투자) M&A형 투자 40.3%

인수합병시장 규모 커지는 가운데, 사모펀드 비중도 증가

■ 글로벌 M&A 거래 규모 및 사모펀드 비중 (단위 : 조달러, %)



외투기업 특혜 사례의 대명사 ‘한국GM’ : 종합자동차사 → 생산하청기지 및 연구용역법인으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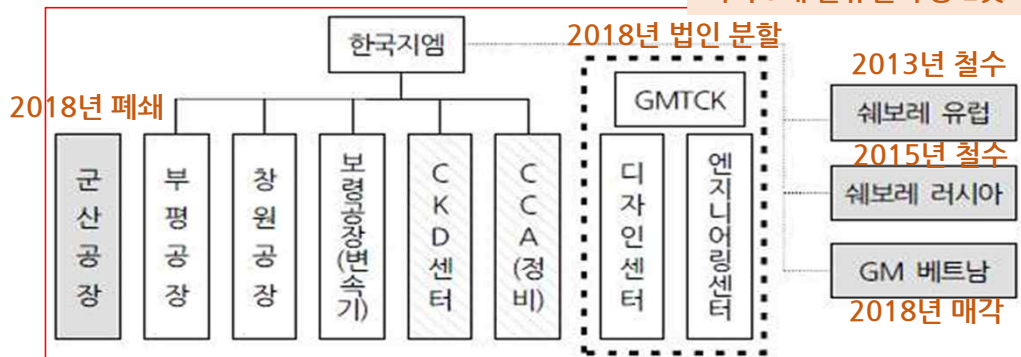
2002년 인수 과정에서 인수자금 지원 및 청라지구 부지 50년 간 무상 임대, 201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 추가출자

→ 군산공장 폐쇄 · 연구개발 사업부 분할 등 사업축소 이전가격 조작, 과도한 연구개발비 부과 등 이윤 빼돌리기

■ 한국지엠 조직도 : 2013 및 2019년 비교



이외 3개 물류센터 중 2곳 폐쇄



2018년 폐쇄

2013년 철수

2015년 철수

2018년 매각

이전가격 조작 등으로 추징금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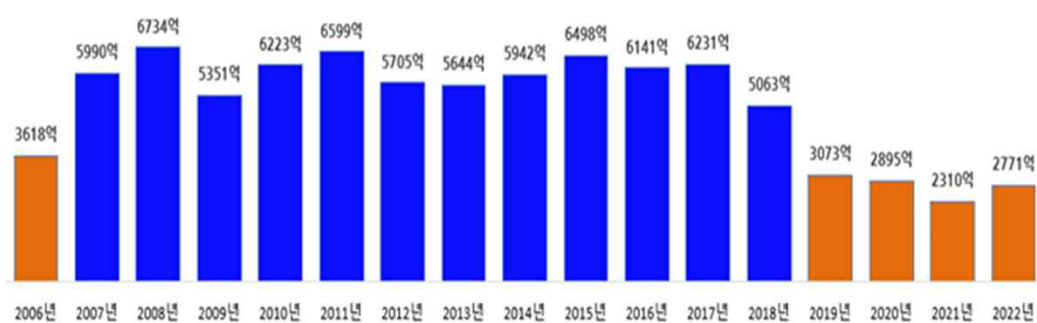
2013년 세무조사로 약 273억원, 2018년 조사 약 226억원 부과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거래 시 세금경감 목적으로 거래가격 조작

부동산 매각 차익 실현 : 군산 공장 및 물류센터 매각

불공정 계약으로 과도한 연구개발비 본사 상납

한국지엠이 본사에 납부한 연구개발비(로열티)



▲ 수치 출처 : 각 연도별 한국지엠 감사보고서

이전가격 조작, 기술 사용료를 통한 이윤 빼돌리기 ‘르노코리아’ 사례

국세청 2013년 2월 이전가격 조작에 따른 700억 과징금 부과, 100억대~1,100억대의 널뛰기 기술사용료
2000년 제2공장 건설 약속하며 2조원대의 부산 공장 부지 5,500억 매입, 공장 건설 이행 않고 유휴부지라며 일부 매각

→ 2023년 생산직 노동자 340명 일방 해고 후 4개월 만에 정부지원 계약직 400~600명 모집

“르노코리아 노동자들은 르노코리아가 지속해서 정규직 채용을 걸어 잠그고 계약직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훈 금속노조 르노코리아자동차지회 수석부지회장은 “10여년 전 5천700명이던 정규직은 현재 3천명 가량으로 감소한 가운데 매년 계약직을 뽑았다가 해고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을 받고 이후 연말에 정규직 전환은 안 된다고 해고한다”고 비판했다. 판매 실적에 대응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인 정규직 채용을 아예 배제한 체 통제가 쉬운 계약직을 활용하는 관행이 이미 익숙하다는 이야기다.”

/ 매일노동뉴스 ‘계약직 340명 내보낸 르노코리아 녀 달 만에 정부 지원 계약직 모집 공고’(2024.10.29)

■ 르노코리아 연도별 기술사용료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액	158	176	296	366	406	416	550	1,142	929	246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522	547	499	1,173	1,088	929	900	1,109	750	710

자료) 각 연도 르노코리아 감사보고서

의도된 적자 · 2016년부터 자본잠식, 치밀한 청산 작업 ‘한국 와이퍼’ 사태

일본 덴소 그룹 100% 지분 보유(덴소 38.25%, 덴소와이퍼시스템 61.75%)

매출의 약 80%가 덴소코리아를 비롯한 계열사에서 발생. 안정적 판매루트 및 계열사 내부 거래가 대부분으로
상품가격과 물량, 원가율과 이익률 모두 덴소 그룹 통제 가능성

→ 2022년 9월 19 MBC 뉴스데스크 [덴소 한국 자회사의 극비 청산 문건 “치밀한 먹튀 준비”] 청산 시나리오 폭로

■ 한국와이퍼 연도별 재무제표 변화 (단위 : 억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641.3	818	849.6	953.5	868.3
매출원가율	97.8%	93.6%	100.5%	91.7%	100.4%
당기순손실	-19.2	-15.6	-70.9	-8.4	-59.6
자본 총계	93.5	78.4	6.4	-0.8	-60.4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	705.3	717.3	636.5	370	275.9
매출원가율	97.7%	95.9%	97.0%	110.7%	129.4%
당기순손실	-48.6	-7.1	-23.4	-70.6	-116.8
자본 총계	-108.9	-116.0	-139.4	-210.0	-326.8

자료) 각 연도별 한국와이퍼 감사보고서

영업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와이퍼는 매출의 약 80%가 덴소코리아를 비롯한 계열사에서 발생하고 있다. 안정적인 판매 루트가 확보되어 있고 계열사 내부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품 가격, 물량은 물론이고 원가율과 이익률 하나까지도 덴소 그룹이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민주노총 총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및 노동의 대응” 중

게다가 한국와이퍼가 생산한 물량 상당수가 덴소코리아를 거쳐 현대·기아 등 완성차로 납품되는데, 그 과정에 덴소코리아 창고를 한 번 거친다는 명분으로 3~4%의 관리비를 덴소코리아에 부담하고 있다. 대주주의 이윤만을 위한 내부거래 설계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통행세’를 내고 있었다.

2021년, 2022년 두 번의 고용안정 합의, 반복된 약속

→ 청산 발표 후 1년여의 투쟁 ; 매각 업체로의 고용 승계는 수용되지 않았지만, 위로금 및 사회적 고용 기금 조성

또한 “청산, 매각, 공장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하며 “부득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매각할 경우 모든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기로 하는 등 2020년 합의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으며, “부득불 인위적인 구조조정 때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전 사원에 대해 (주)DNKR(텐소코리아) 지급기준과 동등 수준으로 합의”하며 만일 이 합의서 불이행 책임에 대해서는 “회사가 조합원 1인당 1억원의 금액을 노동조합에 손해배상”하는 내용까지를 명시해 2020년보다 몇 겹의 보호장치를 강화하였다. (2021년 고용안정 협약서 별첨)

/ 민주노총 총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및 노동의 대응” 중

하지만 지회는 텐소 그룹과 한국와이퍼를 상대로 한 투쟁은 물론이고 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는 등 수많은 쟁점화 사업, 4차례에 걸친 일본 원정투쟁, 대체 생산이 이뤄지는 엘소 창원공장 앞 농성, 텐소코리아를 거쳐 최종 완성품이 납품되는 현대차를 상대로 한 투쟁 등 줄기차게 저항을 이어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2023년 1월에는 이례적으로 법원이 ‘해고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일도 있었다.

아울러 ‘사회적 고용기금’을 텐소 그룹에 요구하고 합의에 이른 점 역시 통상적으로 위로금 수준이 나오고 종료됨과 동시에 조합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자도생의 길로 갔던 한계를 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해볼 수 있다. 물론 처음 시도되는 생소한 사례이고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많은 토론과 논쟁을 거쳐야 하겠으나, 이 시도가 넘고자 했던 과거 운동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할 권리, 그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한국오라클’ 노동자의 힘겨운 투쟁 사례

부당노동행위와 살인적 노동착취에 맞서 2017년 노조 설립, 사측은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기 않고 고의로 교섭을 해태

→ 2018년 5월 16일 총파업 돌입, 83일 간의 총파업 이후로도 521일 간에 걸친 간부파업 진행

/ 2020년 12월 31일 노조설립 4년 만에 최초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당시 한국오라클 노동자들이 겪었던 노동 현장의 실상은 한 조합원의 호소 글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저는 IT 노동자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어지는 밤샘 근무, 슈퍼 갑질에도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야근수당, 대체 휴가 없이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밀어내기, 부당해고 등 회사의 부당한 일들에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왔습니다. …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냥 힘없는 노동자로서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다는 것이고 부당함은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 이 투쟁이 꼭 승리해서 훗날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후배와 자녀들에게는 조금 더 나은 노동환경이 주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파업투쟁 259일, 한국오라클노조 조합원의 호소 글 중)⁴⁰⁾

당시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제기한 한국오라클의 야만적 행태는 매출 규모 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다국적기업 ‘오라클(Oracle Corporation)’ 숨겨진 이면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당시 한국오라클은 10년간 매출이 3천억에서 9천억으로 3배 이상 성장했음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바, 국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자 의혹이 제기됐었다. 수익은 기술 사용료 및 배당의 명목으로 매년 수천억 원이 해외로 송금되고 있었고, 정작 회사 성장에 가장 크게 공헌한 노동자의 급여는 10년간 동결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러한 행태가 가능했던 것은 한국오라클의 본사는 미국이지만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정체불명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투자했기 때문이었다.

/ 민주노총 총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및 노동의 대응” 중



3. 제도 개선 및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인수자금 차입에 활용하는 차입인수(LBO) 원천 금지 명문화
 -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체 신용으로 인수자금 차입하도록 하고, 상환책임도 운용사에 부과
 - 과도한 탐욕을 통제하여 피인수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레버리지 한도(현 400%) 또한 대폭 축소

- 공시 요건 및 영역 강화, 피인수기업 노동자 보호 및 자산 약탈 행위 규제
 - 공시 요건 및 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대외적 투명성 향상
 - 유럽의 ‘대체투자 펀드매니저 지침’ 도입 : 사모펀드 운용사에 부과된 주요 규제
 -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공개, 사업 관련 정보를 종업원 대표에 전달, 24개월 간 모든 유형의 자금 유출 제한 등
 - 미국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이 제안한 약탈금지법(The Stop Wall Street Looting Act of 2019)도 유럽 모델링

- 금융·에너지·교통·의료·언론 및 방송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분야 사모펀드 진입 원천 금지
 - 공공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당해 기업의 노동자나 채권자 이외에도 시민사회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큰 영향을 받게 됨. 이윤극대화가 궁극적 목표인 사모펀드가 이러한 사업 분야에 진입할 경우 접근성 크게 제한. (관련 주무 관청이나 감독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책임과 권한 부여)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 외자 심사 및 통제 기능 강화
 - 외투기업의 진입부터 철수까지 제반 정보 수집 및 경영현황 모니터링과 분석 시스템 구축
 - 고용 창출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전략적 접근, 공적 사업 부문에 대한 심사 강화
 - 일방적 철수(폐업 및 청산), 과도한 이윤 착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 구축
- 근로기준법 개정
 - 정리해고 실시 여부나 노동자에 대한 보상 관련하여 노동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명문화
- 상법 개정
 - 이사 및 주요 주주의 충실의무 구체화
 -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 회사 해산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참여 제도적으로 보장
- 채무자회생법 개정
 - ‘먹튀’ 방지를 위해 회사 폐업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진행함에 있어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 및 동의권한 보장
 - 노동자가 회사의 회생절차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있도록 하는 방안

- 인수합병(M&A), 영업양수도·분할 및 청산 등 기업구조변동, 즉 구조조정과 관련
 - 재무상태 및 영업 부실에 따른 사업구조 재편 및 매각 / 대주주의 일방적 지분 매각 등
-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혹한 구조조조정, 고용 불안정성 심화
 - 인원 감축 및 정리해고, 가혹한 노동강도 및 근로조건의 후퇴
 - 사업부문 및 자산 분할 매각, 불안정 노동(계약직, 시간제, 특수고용 등)의 확대
- 자본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과도한 이윤 착취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
 - 과도한 배당·기술 및 브랜드사용료·자문수수료·지급수수료·이전가격 조작 등
 - 사모펀드의 경우 차입금을 피인수기업으로 전가 (차입인수)
- 조세회피처를 통한 세금 회피 전략 구사, 규제 공백을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 및 소송 남발
 - 조세피난처의 특성을 활용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 노동관계법 및 세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 국내법 무시, 규제 공백 적극 활용, 무차별한 소송 제기
- 경영진의 의사결정권 및 자율성 부족,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 정당한 노사 협상을 해태 또는 지연,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등

- 기업 구조조정 단계별 양상에 대한 이해, 상시적 대응 체계 구축
 - 근로조건 후퇴 및 신규 채용 중단 / 사업장 내외 강제 이동 확대 / 휴가 및 휴직 강요 / 비정규직의 확대 / 직접적·강압적 근로관계의 종료(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 청산·폐업 및 인수합병(M&A)
 - 회사의 목적과 의도, 향후 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수집 매우 중요
 - 단체협약에 '인력 구조조정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경영권 변동 시 고용승계 의무 등' 확보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분석 : 경영·재무상태의 지속적 모니터링
 - 재무(회계) 및 경영기획 부서와의 네트워크 구축
 - 노동조합 상근 간부 대상 재무제표 활용 교육,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증거수집 및 약탈적 행위 방지
- 사안 발생 시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공론화 필요
 - 사모펀드 및 외투기업의 경우 노사관계를 넘어 사회적 쟁점화가 매우 중요 : 언론 및 국회 활동
 -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사회적 공론화로 진입 저지 필요
- 사모펀드는 운용사 및 투자자, 외투기업의 경우 해외 본사 공략 필요, 국내외 연대활동 강화
 - 실질적 영향력 및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주체를 상대로 한 투쟁 필요
 - 국내외 관계회사 노동조합과의 연대 강화, 지역사회 연대활동 강화